

쿠팡이츠 ‘할인 전 수수료’ 제동 공정위 “입점업체 이중부담 개선”

할인비용까지 수수료 부과 논란
배달앱 약관 첫 시정권고 조치
배달의민족, 10개 조항 개선 착수
중기부 협업체 플랫폼 점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해 가게 노출거리 제한, 대금정산 유예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쿠팡이츠)·우아한형제들(배민)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할인 행사의 수수료 산정 기준을 소비자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정해왔다. 예를 들어 정가 2만원의 상품을 5000원 할인해 판매할 경우, 실제 결제금액은 1만5000원이지만 중개수수료(7.8%)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1560원을 부과해왔다. 이는 할인 후 기준(1170원)보다 390원이 많고, 실질 수수료율이 10.4%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는 구조로 보고, 약관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1500만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상당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입점업체의 이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구조”라며 “입점업체가 할인비용과 수수료를 이중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공정위 조치에 대해 “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고, 입점업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쿠팡이츠가 시정권고 수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60일 내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약관법상 시정명령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쿠팡이츠와 배민의 가게 노출거리 제한, 대금정산 유예, 광고료 환불 제한, 일방적 약관 변경 등 10개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발해 두 플랫폼이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플랫폼은 우천·폭주 등으로 배달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노출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통지하지 않는 조항을 고쳐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보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대금정산 유예 사유 명확화 및 이의제기 절차 보장 ▲정산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 명시 ▲판매대금 일부 예치 조항 삭제 ▲약관 불리 변경 시 사전 개별 통지 등도 개선

한다.

쿠팡이츠는 리뷰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고쳐 입점업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고,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에 과도한 보상·비용 부담을 지우는 조항은 삭제했다. 배민도 배달앱의 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속 조항을 통해 주요 의무를 추가로 정할 수 없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이번 조치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점업체가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약관 심사는 최근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배달앱 사용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이 증가하며 입점업체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체가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규모는 2022년 31조 6000억원에서 2024년 36조 9000억원으로, 음식점의 배달앱 이용 비율은 같은 기간 26.3%에서 31.7%로 지속 증가 추세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불·호우 피해지 중심 ‘농촌 재생’ 지원

농식품부, 농촌정비사업 9곳 추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의 재생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2025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9개 지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 산불과 호우 피해가 컸던 포천·영양·청송 3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주민 생활공간 회복과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그 부지를 마을 쉼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지구당 평균 100억 원(5년간)이 투입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다.

올해 추가 선정된 지역은 ▲경기 포천시 내촌지구 ▲충북 증평군 화성리지

구 ▲청주시 금대지구 ▲충남 논산시 읍내지구 ▲당진시 갈산지구 ▲보령시의평지구 ▲경북 청송군 사랑지구 ▲영양군 석보·입암지구 ▲전남 해남군 남창지구 등 9곳이다.

이 가운데 포천시는 호우피해지역, 영양군·청송군은 산불피해지역으로, 주민 주거지 인근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철거 및 기반 정비를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주민 쉼터·주거시설·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포천 내촌지구는 폐축사 1개소와 주민공공시설 2개소를 정비해 복합문화체육단지와 마을공원을 조성하고, 영양 석보면은 폐교·방치시설을 철거한 뒤 임대주택과 농기계 임대·수리시설을 들일 예정이다. 청주시 북이면은 축사 3개소와 폐축사 3개소를 정비해 마을공원 및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재근로자·가족 2300명 숲속서 심리 회복

근로복지공단, 치유 프로그램 1년 성과

“숲에서의 한 걸음은 치유로, 일터로의 한 걸음은 희망으로 이어졌다.”

최근 1년여간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숲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3일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산재근로자 산림치유 협력사업’의 1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근로자와 가족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숲 해설, 명상, 가족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산림치유 과정은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산재근로자는 “산재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됐는데 숲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며 “오랜만에 가족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위로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0개 산림복지시설에서 총 85회 운영된 산림치유 프로그램에는 2320명의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참여했다. 예상보다 높은 수효로 예산이 조기 소진됐으나, 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산림치유가 심리회복과 재화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만큼 2026년에는 ▲유족의 상실감 극복 지원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심리회복 프로그램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산림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궁극적 목표는 근로자가 빠르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력부담 큰 수도권에 ‘영농태양광’ 시동

농식품부, 12월 중 시범사업지 선정
발전수익 지역공동체에 환원
의무영농 실태 점검 병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농식품부는 13일 “전력계통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발전용량 1MW 이상 규모의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 2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업·농촌 내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공동체 기반 모델을 실증하는 성격이다.

사업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차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



영농형태양광 모습.

/뉴시스

된다. 조성 이후에는 전담기관을 통해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을 모니터링해 제도 취지인 ‘의무영농’을 확보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5일 지자체 설명회를 열고, 10~11월 후보지 발굴 및 마을 구성을 거쳐 12월 중 최종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설계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발전사업 인허가, 자문, 사업관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하며, 향후 제도화에 필요한 개선사항도 도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과 병행해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마을 단위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역순환형 모델로, 농촌소득 다변화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박해정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완다 고용서비스 현대화, 한국이 돕는다

고용정보원, 현지 정책관계자 초청

한국고용정보원은 르완다의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고위 정책관계자를 초청,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프랑수아 응고보카(Francois Ngoboka) 르완다 노동부(MI FOTRA) 차관보를 비롯해 노동부 및 직업훈련청 등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간부 6명이 참여한다.

고용정보원은 2024년부터 민간기업과 협력해 ‘르완다 통합적 일자리 정보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고용24 플랫폼, 워크넷, 인공지능(AI) 기반 잡케어(JobCare) 등 첨단 고용서비스 모델을 공유하고, 현지 적용 가

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고용정보원 본원을 비롯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잡월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직업 관련 주요 기관을 방문한다.

이들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청소년 진로체험 ▲산업별 인력수요 분석 및 직업정보 개발 ▲산업 맞춤형 기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고용정책 운영 경험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정보원이 자체 개발·운영 중인 AI 맞춤형 상담 및 경력개발 서비스의 시연과 현장 참관도 포함돼, 참가자들이 실제 고용서비스 혁신 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세종=한용수 기자